

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0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5 . 1 . 19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학생 및 유가족,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(수탁기관 : 명지병원) 운영한 「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」 위탁 업무가 종료 되고, 2015년부터 예산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 업무가 안산시로 이관되어
-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(안)

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

- 운영기간 : 2014.5.1.~2016.12.31.(최소 3년간)
- 장 소 :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, 프라움시티 2층
- 설치기관 : 보건복지부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(명지병원 / 2014.5.1.~2014.12.31.)
- 운영인력 : 34명
- 운영예산 : 40억(2014년도 국비 100%)

가. 사업 개요

- 시설명 :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
- 소재지 : 프라움시티 2층(단원구 당곡로 33)
- 시설규모 : 642m²(195평), 12실
- 운영인력 : 총 6팀 35명 내외
(정신과전문의, 정신보건간호사, 정신보건사회복지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사회복지사, 행정요원)
- 공간구성 : 사무실, 강의실, 회의실, 상담실, 커뮤니티 공간 등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1년(2015. 1. 1 ~ 2015. 12. 31)
- 위탁사무 : 안산시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
 - 유가족 사례관리 사업
 - 유가족 형제·자매 등 지원사업
 - 초·중·고등학교 지원사업
 - 유가족 복지지원 및 연계사업
 - 기획, 교육 및 홍보사업
 - 프로그램 및 치료사업
 - 지역사회 및 시민교육, 지역사회 공동체 치유관리 사업 등
- 소요예산 : 30억원(국비50%, 도비50%)
 - 국비 20억, 도비 10억(10억 유보)
 - 유보액 10억 : 경기도 1차 추경 반영
 - 교부신청서 제출
(현재 예산편성된 30억 중 1차 교부액 10억 교부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2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기관단체)
-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5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세월호사고와 관련하여 재난피해자(승선자 및 유가족, 간접피해자)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·평가·치료·교육·복지지원·추적관리·지역 사회회복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
- 이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

□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2015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 예정(현재 미편성)

- 확정내시 공문 후 교부신청서 제출(2015. 1. 13)
- 1차 예산교부(10억) : 2015. 1. 16.
 - 성립전 예산 편성 요청

나. 합 의 :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센터 이관 합의 완료

다. 의회사전협의

- 일 시 : 2014. 12. 23(화) 11:00
- 장 소 :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실
- 참석인원 : 11명
 - 의 회(8명) : 문화복지위원 5, 전문위원 2, 서기
 - 집행부(3명) : 단원보건소장, 보건행정과장, 담당계장
 - 근 거 :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
 - 결 과 : 협 의

라. 기 타

- 재난은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(PTSD)의 경우 짧게는 수일에서 수십년 후에 발생할 수 있고, 세월호 피해자가 안산시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,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며,
-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운영 지원은 안산시에서 담당하더라도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비 부담이 없도록 보건복지부,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